

# 전남도, AI·우주산업 거점 도약 확실한 디딤돌 놨다

미래먹거리 내년 국비 1614억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 반영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기반 확보

전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AI·우주산업 중심의 미래먹거리 국비를 대거 반영, 성장 기반을 탄탄히 다지게 됐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예산에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국가AI컴퓨팅센터 등 총 1,614억원의 AI·우주산업 관련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 수년간 추진한 'AI 중심지 전남 조성 전략'과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비전'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올해 국내외 데이터 기업과 AI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오픈AI-SK 데이터센터와 국가AI컴퓨팅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를 잇따라 유치했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내년 정부 예산에 다양한 AI 관련 사업들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은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118억원(총사업비 2조5,000억원)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1,196억원(총사업비 1조200억원) △대불산

단 AX 실증 협업 플랫폼 구축 20억원(총사업비 220억원) △철강·금속산업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센터 구축 28억원(총사업비 220억원) △여수국가산단 AX 실증산단 구축 20억원(총사업비 205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전남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AI 기반 제조혁신과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또 우주산업 관련 예산도 대거 확보해 글로벌 우주 강국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할 토대를 닦았다.

주요 사업은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20억원(총사업비 485억원) △국방 발사지원시설 구축 6억5,000만원(총사업비 417억원) △민간 발사장 1단계, 2단계 조성 112억원(총사업비 1,705억원)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27억원(총사업비 274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우주산업 인프라 확충과 민간기업 참여 촉진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교두보로 삼을 예정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규 첨단 사업을 적극 발굴, 2027년 국비 확보에 온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 전남여성대회 표창 수여

김영록 전남지사가 16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제28회 전남도 여성대회'에 참석해 지역발전과 여성의 권리 신장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전남도 제공

## '10년간 의무 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

### 지자체 지원...의료공백 해소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국비 확보로 AI와 우주산업을 빠르게 추진할 든든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며 "전남이 대한민국 AI·에너지 수도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밝혔다.

법안의 효력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발생한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는데, 이중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역의사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 받는다.

의료계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서울=김현수 기자

## 민주, 12·3 비상계엄 2차 종합특검 본격 추진

### 지지층 '내란 완전청산' 호응 통일교 공세차단 포석 의미도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3대 특검(채상병·내란·김건희)으로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지층의 불만에 호응하는 동시에

이른바 '내란 청산'이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임을 부각해 통일교 강금 수수 의혹을 고리로 한 야권의 공세를 상쇄 하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종료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면서도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핵심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은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며 "당 입장에선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2차 종합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은 '확실한 내란청산'을 바라는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가 위헌 논란 속에 지연되는 상황에서 종합특검 카드를 내세워 당지도부의 개혁 의지가 굳건함을 부각 하려는 '집토끼'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흐트러진 대야 공세 전선을 가다듬고, 정국의 초점을 '계엄 책임론'으로 다시 돌려놓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미도 일한다.

민주당은 야권의 통일교 관련 특검 요구는 일축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채상병·내란 특검에

이어 오는 28일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의 결과까지 분석한 뒤 종합특검의 조사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조사 범위에 담길 가능성성이 있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는 24일 까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종합특검 법안 처리는 내년 1월 임시국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

서울=김현수 기자

## 최선국 도의원 "전남도, 대불산단대교 건설 서둘러야"

### 서남권 경쟁력 강화 대동맥"

전남 서남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대불산단대교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도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16일 열린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불산단대교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서남권 산업구조 전환을 뒷받침할 전략 인프라"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대불산단대교는 지난 36년간 조선·해양플랜트·자동차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전남 제조업을 견인해 온 핵심 산업 거점이다.

하지만, 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교량이 없어 물류 이동이 우회도로에 의존하고 있고, 이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운송 지연이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대불산단대교는 목포·남향과 대불국가산단을 직접 연결하는 종장 3.3km 규모의 해상교량으로 총사업비 2,67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2023년 '서남권 SOC 신프로젝트'를 통해 이 사업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으나, 교통량 중심의 경제성 분석에 물려면서 국가사업 전환과 예산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지금 전남은 에너지·데이터·제조·물류가 융합되는 산업 대동맥"이라며 "이러한 구조 변화 속에서 대불산단대교를 기준 교통시설 중심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근산 기자

## M 전남매일 창간 36주년 기념공연

대학로 오픈런공연 평점 1위

스무 살이 된 너에게,  
엄마 아빠의 스무 살을 노래할게

1994, 타임슬립 뮤지컬

Musical  
성데이

2025.12.24 ~12.28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12/24일(수), 12/26일(금) 19:00 | 12/25일(목), 12/27일(토), 12/28일(일) 14:00, 18:00

예매 NOL티켓 1544-1555 | 티켓링크 1588-7890 | 예스24티켓 1544-6399